

제 4회 『자유 101』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18년 12월 30일 경남 창원시 할리스커피에서

‘일자리를 침체된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 지역적 원조가 필요하다.’

-지역적 원조는 선택적으로 비용을 낮춤으로써 어떤 지역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새로운 장비에 대한 보조금, 더 낮은 지방세, 면세 기간 등등, 모두는 기업들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가지 않았을 곳으로 유혹하려고 한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도움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그리고 쉽게 이동되는, 한계 기업들을 끌어들인다. 보조금이 끝날 때, 우리는 침체된 지역들에서 비경제적인 기업들을 여전히 발견하는 반면, 쉽게 이동되는 것들은 생산 비용이 더 낮은 곳으로 가버린다.

‘보건과 같은 어떤 것들은 이득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득이 사람들을 자극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해 준다면, 그것은 공급을 확실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재화들과 서비스들은 비용이 들고, 이득의 전망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좋은 방법이다.

의사가 펼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으나,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라 맞춰진 지정 가격에 하다 보니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안락사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에 따라 한국 의료는 최고가와 최저가만 남고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진국들은 세계의 부의 너무 큰 몫을 가로챘다.’

-세계의 부의 “너무 큰 몫”을 가로채기는커녕, 선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위해 기회들을 만들었다.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득을 보는 것이 더 크다.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때, 그들은 묵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도록 허락되는 이유는 법의 원칙들 중 하나가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고 단언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와 자위권으로부터 나오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해야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 행동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증거가 생길 때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만약 검찰 당국이 그것에 단지 한 번의 기회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송을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오직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있는 경우에 만 피고인을 재판에 부쳐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수성이 난무하게 되면 보편성이 사라진다. 우선은 결정이 나면 그에 대한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안정이 된다.

‘현명하게 계획된 경제는 무작위적 혼란보다 더 효율적이다.’

-자유 사회는 무작위적 혼란보다 더 조직되어 있고, 어떠한 중앙에서 계획되는 대안보다 더 독창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에게로 끊임없이 자원들을 돌린다.

자생적 질서도 어떠한 질서 속에서의 질서이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다. 원론적으로는 자생적 질서의 타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현명한 계획경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단, 현명한 계획경제라고 한다면 자생적 경제를 위한 계획이다. 계획경제를 위한 계획경제와는 물론 다르다.

※사담

◦ 학회의 작은 과제

1. 중고나라에서 매출을 5만원 이상 올린다.
 2. 유가증권, 비트코인 등 자산가치가 5천원 정도 구매해 볼 것.
- *위 1, 2번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오고 짧은 브리핑을 준비해볼 것.

◦ 회사생활을 하게 된다면 침묵할 시 동의한 것이 된다. 자신이 아는 것이고 입장과 다르다면 얘기를 해야 한다.